

韓國 環境運動의 발전에 關한 一考

김 성 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2002년 8월 31일 접수; 2002년 12월 31일 채택)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ovement of the Rep. of Korea

Sung-Soo Kim

School of Politics and Communication,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Korea
(Manuscript received 31 August, 2002; accepted 31 December, 2002)

This research attempt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It finds that the emergence of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was constrained by the authoritarian nature of Korean politics. In 1970s, environmental movements were primitive and were not organized ones. With the wake of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began to get some momentum. And in the 1990s, environmental movement to save clean water has achieved some success in certain areas. However, the emphasis on the growth of local economy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system has brought heavy degradation of local environment. The coming of the phenomena of Globalization and Cyber-Age has brought positive effects on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Key words : Emergence of environmental movement, Local autonomy system,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new millenium

1. 서 론

1962년부터 1979년까지 18년에 걸친 박 정희 대통령 의 權威主義體制는 정책 쟁점을 체제외부에서 생성되게 하기보다는 체제관료가 쟁점정의를 행하며, 외부에서 생성되더라도 그것을 체제가 재정의하고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상의 특징은 70년대의 環境政策의 실질적인 부재 현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80년에 한국정부는 환경청을 설립하고, 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의 정비 및 시행규칙의 제정 및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한국의 환경오염수준은 변화나 개선의 징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무렵부터 시작된 환경관련 피해의 진정, 농성, 시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왔다.

1990년의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반대 시위 사태는 밀실행정에 의존해온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정책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1991년의 페놀 오염사건은 낙동강지역을 상수원으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물관리정책의 非효과성과 환경운동의 긴요함을 인식하게 했다. 또 1994년에는 낙동강물 약취사건으로 부산경남지역의 상수도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1995년부터는 낙동강상류지역인 위천 지역에 국가공단을 건설하고자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열망과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부산경남지역주민 사이의 지역간 갈등은 경제 회복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2001년말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위한 4대강 특별법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시장은 다시 위천 공단 추진 계획을 선언하여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 모두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의 동강 댐 건설반대운동과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 반대운동 등은 나라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Corresponding Author : Sung-Soo Kim, School of Politics and Communication, Inje Univ., Gimhae 621-749, Korea
Phone : +82-55-320-3145
E-mail : dpsdkss@inje.ac.kr

바 있고 싸이버 시대의 환경이슈의 확산의 대표적 사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이후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한국의 환경운동의 변천과 그 發展相은 어떠한가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고 또 그에 상응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성과는 어떠한가를 논의하여 환경운동의 실제와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한국 환경운동의 형성과 변천을 조사하는데, 1979년의 환경청 설립 이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온 지역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제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환경운동의 주요변화인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의 구별의 비효용성과 모호해짐을 지적하여 환경시위와 환경운동의 새로운 이분법을 제시하고, 1991년부터 실시된 地方自治制度下라는 脈絡에서의 환경운동을 논의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IMF 이후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시대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시대 혹은 싸이버 시대의 환경운동의 변화의 양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한국 환경운동의 등장, 전개 및 발전 과정임으로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전개 양상을 시기별로 그리고 특징적 변화과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주로 문헌연구 및 사례 연구 등에 의존하게 된다. 시기별로 환경의식 관련 여론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본 환경의식의 변천을 논의하고, 중요한 환경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환경운동의 특성과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자료로는 초기의 환경운동에 관한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들과 환경운동 관련 신문기사, 환경운동단체 간행물, 오염 피해자 인터뷰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이고 묘사적이고 설명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의 등장 원인과 양태의 분류, 설명,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책의 제시와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적인 틀을 마련하여 사례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환경학, 환경정책,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학, 여성학, 노인학 분야 등에서도 환경운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그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들을 간략히 논의하여 향후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韓國 環境運動의 형성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내면적 태도를 環境意識이라고 한다면, 환경의식의 外部的 表出을 환경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극적

인 의미로는 공해피해에 대한 對症의이고 일과성적 시위와 농성 등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참여의 범위가 보다 확산적이고 지속성 있는 예방적 차원을 포함하는 환경보호운동을 의미한다. 宇井純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고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 또 ‘환경문제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주체들이 일정한 전략과 방법을 구사하여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자연적 및 사회적 상황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실천적 활동’이라 정의될 수 있다. 즉 환경운동은 환경의식을 환경정책에 구현하는 것을 강제할 뿐 아니라, 환경정책의 엄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2.1. 환경의식의 변천과 환경운동

2.1.1. 1970년대의 환경 운동

한국정부는 1962년에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한 직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1967년에야 비로소 법의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 ‘공해방지법’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선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집행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실효를 거둘 수는 없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제의 실시, 환경오염도의 측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비용부담제의 도입 등으로 공해방지적 성격에서 환경보전적인 성격으로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후에 규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9년에 개정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의 추구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요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정부는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였다. 둘째, 비록 환경에 대한 의식이 존재했다라도 그것을 명백한 이슈로 결집하고 政策的 議題化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거의 없었다. 즉 당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물론 야당의 경우도 공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거의 미미하였다. 정당들의 소극적인 대응태도와 달리 일부 환경전문가와 언론들은 연구발표와 환경관련 기획기사의 연재 등을 통하여 일반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미미하게나마 인식하는데 일조하였다.

제3공화국시대의 후반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發芽가 이뤄진 시기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을 범주화하는데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宇井純은 공해반대운동은 근대사회의 시민적 권리인 투표, 청원, 재판에 중점을 두는 시민운동과 담판, 농성 등이 추가 되는 주민

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또 도시형과 농촌형의 분류도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한편, D.Vogel은 영국의 환경주의자들의 조직을 논의하면서, 정부와의 협조관계의 수립이 궁극에는 영국환경운동의 정착요인으로 보고 있다²⁾. 일본의 환경운동을 연구한 M.Mckean은 주민운동의 주요변수로서 운동가의 층위과정, 환경에 관한 견해, 운동의 구성양태 및 전술 등을 강조하였다³⁾.

이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환경운동을 범주화하는 주요변수는 구성원들의 성분과 자질, 정부와의 관계, 운동활동의 양태 및 자금조달의 방법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캠페인성의 환경보전운동,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운동, 그리고 민간시민단체위주의 시민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세 종류의 환경운동이 상호교류 없이 발생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連帶性的의 결여는 환경운동의 효과성을 저해한 주요요인이 되었다.

1977년 정부의 지원으로 自然保護運動이 시작되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의 보전, 손상된 자연의 회복, 행락지역의 청소, 그리고 쓰레기 수거 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78년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는 등의 상징적 노력을 보였으나, 경제성장이 환경에 끼친 악영향과 공해대처방안을 고안하는 노력을 경시함으로써 성과는 미약하였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상징적 운동으로 돌림으로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흐리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1970년대 말엽은 공해시설의 입주로 인하여 농업과 어업의 생산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보상요구와 공해병에 따른 생존권의 요구가 증가되는 住民運動이 대동한 시기였다. 1979년 6월 울산의 삼산평야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남해화학주변의 농산물오염이 심화되어 집단농성 등이 벌어졌다. 한편, 市民運動으로서의 환경운동은 그들의 생계나 삶의 환경이 공해산업이나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환경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1979년 마산 시민들의 마산만 淸淨化運動이 그 시초이다. 이 운동은 상징적 효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속적인 결과를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2.1.2. 1980년대의 환경의식과 환경 운동

1981년에는 1980년부터 업무에 들어간 환경청이 환경보전법을 시행하는데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관리단의 설치, 배

출부과금제도의 도입과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하였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을 민간인의 사업에까지 확대하고 환경기준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또 한차례 개정하였고 제 6공화국 초기에 진행된 행정개혁심의 위원회등의 활동결과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사회부의 外廳 조직이던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고, 환경처보다 집행권한이 강화된 環境部로 昇格되어 오늘에 이르고있는데 이러한 위상 변화는 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은 빈번하게 발생한 공해사건을 접하면서 생존환경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게되었으나, 경제성장의 당위성은 여전히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환경의식조사”라는 논문에서, 변동건교수는 1985년의 시점에서 조사표본집단의 50%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⁴⁾ 응답자들은 환경문제의 주요원인으로서 정부의 장기적 안목을 지닌 정책의 부재, 과밀한 인구 및 이기적인 경제활동을 들고 있는데, 응답자의 42%가 정부의 대책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77%의 응답자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족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정당들의 소극적 자세를 들 수 있다. 공해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하는 것과 항의성명을 발표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에도 한국의 정당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독자적 행보를 취하지 않았다. 둘째, 국민들의 의식 속에 고착된 지속적인 성장욕구는 환경보전이라는 심정적 동의와는 달리 정부에 확실한 정책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화를 주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변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985년의 시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답하였다: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정치적 민주화, 사회복지의 증대, 인권보장, 외채상환, 교육제도개선, 환경보전, 그리고 문화활동의 순서였다. 즉 국민들은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을 원하면서도, 정부가 성장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셋째, 환경파괴의 피해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환경의식의 성장과 지속적 성장육구가 병존한 가운데, 제5공화국시대는 환경운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이다.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국민계몽, 환경요원교육, 자가측정대행, 환경영향평가대행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했으며, 민간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였다⁵⁾. 그러나, 이 협회의 활동은 주요 환경오염 기업들에 대한 압력행사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은 시민의 책임도 크다는 관주도의 계몽운동에 그쳤다.

주민운동의 경우, 운동의 투쟁성과 기간의 지속성에 있어 온산의 주민운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온산병은 아연과 카드뮴의 부적절한 처리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증상은 심한 두통, 설사 및 가려움 등으로서 일본의 공해병 '이타이 이타이 병'과 유사하였다. 주민들은 비철금속공단에 대해 약 7년간 항의를 지속해왔는데, 1985년에 언론매체에 의해 온산병의 존재사실이 크게 부각되어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는 2369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최소한의 마찰과 비용으로 이주사업을 실행하고자 한 경제기획원의 계획은 정당한 보상보다는 단기간에 이주를 촉진시키고자 했는데 이주비용은 정부가 300억원을 업체가 74억원 그리고 울주군청이 53억원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1985년 10월에 발표되었다⁶⁾. 조급하게 결정된 이 계획은 이주민에 대한 정당한 재정적 보상이나 신거주지에서의 직업알선 등과 같은 적절한 대책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1986년 7월에 정부는 가구당 보상액을 최종통보했는데, 주민예상액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과격한 시위를 촉발시켰다. 7월부터 9월까지 과격한 가두시위와 주민들의 연좌농성이 반복되었으나, 결국 '이장단 회의'가 중심이 되어 1차 이주대상주민들은 9월과 10월에 걸쳐 직접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간접보상금은 86년말 수령하여 이주보상금문제가 일단락되었다⁷⁾.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는 온산주민운동의 주요 특징은 첫째, 투쟁이 보상액수에 치중하여 적절한 금액에 대해 주민들간에 내부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하여 운동의 효과성을 경감시켰다. 둘째, 주민들은 공무원과 기업가들과의 논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정보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지역의 성직자들과 재야 등이 지원하였고, 서울의 공해문제연구소등 외부단체가 '울산 온산 공해이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의 관심을 지속시키려 했으나 후속작업의 미흡과 또 도시의 지식인 그룹과 주민들간의 실질적인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별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시민운동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1983년의 목포시민운동을 들 수 있다. 82년 진로주정공장의 영산강 중류 영산포 이전계획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을 내포하여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도 저급한 수돗물을 공급받아온 목포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했다¹⁾. 주정폐수가 영산호의 수질을 황폐화시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83년 6월 17일 목포시 라이온즈 및 로타리클럽, 상공회의소, 예술인협회, 청년회의소, 의사회, 약사회 등이 중심이 되어 상설기구로 '수질오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는 부녀자들이 유인물 배포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전파하여 시민홍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¹⁾. 그리고 목포시 주변지역 주민들도 이 운동에 합세하여 지역 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한 전남도지사는 배출시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진로측은 7월에 도지사의 결정에 항의하는 소원을 환경청에 제출하였는데, 현장에 내려와 보지도 않고 단 10일간 고려한 뒤 환경청은 전남도지사의 결정을 번복하였는데, 진로측의 계획이 환경보전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적절한 오염방지시설계획을 포함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목포시민들의 항의를 재촉발하여, 서명운동, 가두방송, 호소문편지 보내기, 국회에 청원서 보내기 등이 전개되었고, 종교계도 뒤를 이었고, 영산호 환경보전위원회는 목포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청회 및 시민결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0월에 진로측은 주정공장계획을 반월공단에 설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목포시민의 환경운동은 최초의 전시민적 차원의 성공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도시의 유지 및 중상층(upper middle class)과 연대하여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맡음으로서, 정부측이나 진로측의 유화적 설득에 妥協案을 내지 않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경운동에 참가해야할 정당성과 절박감을 신빙성 있게 인식시키는 노력 등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목포시민운동의 한계성은 '진로주정공장을 다른 곳에 세워라' 등의 지역 이기주의적 슬로건과 반월공단으로 이전시의 문제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하지 않았고 운동이 주로 건의, 청원, 진정 등 소극적 형식을 취했던

점이다. 결국 주정공장의 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私企業인 진로회사이지 환경청이 아님을 우리는 주시해야 하는데, 市民運動이 제품의 이미지 훼손과 진로제품의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져 가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에 환경운동과 소비자 운동이 접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목포시민운동이외에도 80년대 중반에는 都市의 민간단체 및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소규모의 환경운동을 벌였는데, 소음 및 유독성 악취에 대하여 농성 혹은 시위를 벌였으며, 도시의 주부들이 한국 공해문제연구소가 주관한 공해강좌에 참여하여 近代化와 産業化의 폐해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主婦들은 후에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에 참여하여 '공해고발전화'를 설립하여 공해관련 지식과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폐수 배출 사례 등의 고발을 접수하였다. 또 87년부터 구로동, 상봉동등 서울의 공해 우심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조직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등은 80년대 중반 무렵에는 환경오염이 공단지역과 도시주거지역을 불문하고 발생하였고, 도시의 시민들이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도가 높아져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1.2. 1980년대의 환경운동의 평가

1980년대 초기에는 공단지역주민들의 공장폐수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업수확의 격감과 어장피해에 따른 재산 및 건강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민운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예방적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성공한 事例를 우리는 목포시민운동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늘어나서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농어촌의 주민운동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보상금획득을 운동 목표로 삼는 경제투쟁으로 변질되기 쉽고, 시민운동은 치열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제의 本質로 접근하는 강점을 지닌다 하겠다. 다른 한 특징은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의 연결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동일한 강도의 환경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사건이 大衆의 注意를 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強度(intensity)가 치열할 수록 그리고 範圍(scope)가 확산적일수록 용이하며 정책의 제화(policy agenda)되기도 용이한 것인데, 80년

대는 환경피해에 대한 인식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덜 확산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온산주민운동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들의 전문성 및 법률적 지식의 부족은 운동의 지속적 성공에 심각한 장애요소였던 것을 기억하면, 시민운동의 성격은 꾸준히 시민들을 각성시키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實踐 可能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호기금을 조성하며, 그리고 常設組織化하여 항시 주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무한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시민운동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국민의 環境意識도 점차로 높아져왔다. 1987년 환경청은 전국의 1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식조사'를 실시했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냐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69.1%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8.7%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자는 생태학적 개발(Eco-development)을 회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의 항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및 항의를 제기한 경험은 낮았고(34.3%), 대개 구청, 읍, 면 사무소(49.3%)를 통해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ibid.: 46). 공해업종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경우,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괜찮다가 70.1%이고 절대로 안된다도 22.5%나 차지하여 공해업종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6.9%이고,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43.1%로서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40.9%)와 시간이 나면 참여하겠다(52.3%)를 합치면 93.2%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의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방법에 관해서는, 시민 및 사회운동에 참여(55.3%), 환경오염제거작업에 참여(22.5%), 비용 및 세금부담(8.1%), 환경오염조사단계에 참여(7.4%)의 순으로 나타났다(Ibid.: 48-51).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정치문제화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환경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모르겠다(43.7%), 투표한다(38.1%), 투표하지 않는다(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시책 중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소득

적차문제(25.8%)를 제 1의 과제로 보았으며, 제 2의 과제로서 사회복지문제(22.1%)로 나타났으며, 환경문제는 제 3의 중요과제로서 응답자의 17.1%가 지적하였는데, 그 다음으로는 교육문제(13.9%), 교통문제, 고용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Ibid.: 175-177). 지난 1982년 환경청조사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제 1의 과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불과 5.7%였던 것에 비하면, 또 조사항목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1985년도의 변동건 교수의 조사에서 하위순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환경의식의 괄목한 심화를 동시에 국민들 중의 상당수가 환경문제의 폐해를 경험한 빈도가 높아져왔음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87년 환경청조사의 시점은 1987년 6.29선언이 발표되어 민주화의 전망과 기대가 팽배했던 9월 하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한 점도 있고 국민들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임해주기를 요구하였다고 하겠다.

3. 1990년대의 환경운동

1991년에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2기 지방의회 및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중앙정부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진행되던 국토개발과 공단의 입주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환경운동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1. 1990년대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1989년 여름 수도물에 중금속이 검출되어 일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생수와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이다. 앞에서 우리는 환경의식의 바랍직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성숙을 목격하였는데, 수도물 파동에서는 이기적인 환경의식의 발현도 보여졌다. 권태준 교수는 이를 이기적 환경의식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각개도피적 환경대응은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근시안적 몸부림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共同體의 환경윤리와 보호의식에 혼돈만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환경의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 1990년 10월 환경청은 대륙연구소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고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4.4%였고 피해가 없다는 응답은 17.9%이었으며, 2천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오염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환경의식의 심화를 증명했다. 정부의 시급한 과제 1위가 민생치안(47.3%), 2위가 환경오염방지(41.5%)로 나타나 정부정책에서 환경정책으로의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75.6%가 형식적이다 및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여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있으며, 대상자의 73.6%가 환경보전이 경제성장능력을 높인다고 응답하여 경제성장의 명분으로 환경부문의 빈약한 투자를 정당화하기에는 국민의 환경의식이 이미 상당히 성숙하였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대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97.5%나 되었는데, 홍보내용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다양화하고(55.9%) 지금보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29.7%)는 의견도 높았으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은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51.2%였다.

거주지역에 공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공해는 감수하겠다는 대답은 9.6%인 반면, 공해방지시설만 완벽하다면 들어와도 좋다는 38.6%였고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다. 환경운동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거주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웬만하면 견디겠다(12.6%) 및 이사하겠다(6.7%)는 대답보다는 주민들의 모임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겠다(41.4%)와 오염원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 혹은 건의하겠다(39.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환경의식의 증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의지는 앞에 언급한 환경관련시위의 급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초엽의 한국 국민 대다수는 생활환경의 보전의지가 매우 높으며, 또 행동으로 환경권을 수호해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환경의식의 심화는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한덕웅의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자각’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1993년 11월 서울, 중부, 영남, 호남, 강원 등 5개 지역의 대학생과 학부모 1천8백12명에 대해 환경, 정치, 경제, 교육 등 3백36개의 사회문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반응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오염이 79.8%로 최대의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식수오염(60.76%, 4위), 산업폐기물, 공장폐수(60.68%, 5위), 대기오염(55.9%, 8위) 등 환경문제 50%이상 이 조속히 해결돼야 할 사회문제로 지적한 항목 16개 중 상위 4개를 차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회문제가 환경문제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환경의식

의 심화는 1990년대의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이미 예고 및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상수원의 오염과 폐기물매립지 건립 등 다수 시민의 관심을 끄는 즉 환경오염피해의 확산적 성격과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으로 인하여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에서 발생하고 직접적 피해를 받지 않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면 市民運動이고, 농어촌 등 오염지역에서 발생하면 住民運動이라고 정의하던 이분법적 분류는 그 방법론적 효용의 기반을 점차 상실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의 사상공단인근지역주민들의 경우처럼 도시내의 일부지역에서도 오염의 직접피해를 경험하거나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오염항의시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위천공단관련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의 갈등사례처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래 廣域自治團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운동도 활성화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의 이분법적 분류보다는 지역적 환경시위와 환경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주민이 환경오염에 접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돌출적이고 일시적인 투쟁은 지역적 환경시위라고 분류하고, 환경오염의 발생여부에 관련 없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식인과 상시적 구성원이 참여하여 환경의식의 구체화의 형태로써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환경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1995년의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보호운동은 국방부 군무원아파트건립에 반대하는 창원의 지역적 환경시위가 한국조류보호협회와 경실련 등이 참여하여 전국적 규모로 확산된 경우도 있었다. 1990년대는 지역적 환경시위와 환경운동이 병행하여 성장하였고, 특히 환경운동은 다양한 양태로 분화, 발전하였고, 또한 통합의 움직임도 일어났다.

우선 지역적 환경시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치안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0년도 전반기에 전국에서 73차례에 걸쳐 약 2만 5천명의 주민들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 한다. 경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식수오염과 관련된 시위가 21회, 폐기물매립장 건설반대시위가 19회, 폐유피해보상시위 12회, 대기오염항의시위 7회 등인데, 공장지역의 공기오염과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파괴가 주민들의 큰 반발을 받았다고 분석됐다. 항의나 피해보상의 요구가 아닌 생존권의 확보의식은 90년 11월의 핵폐기물처리장건설에 반대한 주민전체가 참여한 안면도 사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 특히 쓰레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빈발하였고, 진주 지역의 경우처럼 폐기물 소각로 입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 즉 공해유발 또는 주거환경 위해시설이 동네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님비(NIMBY)현상의 확산은 앞서 언급한 권태준 교수의 이기적 환경의식이 극단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의 신장에 따른 국민 각자의 권리의식의 성장과 환경의식의 심화에 힘입은 바 큰 님비 현상은 일견 시대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나친 님비 현상은 결국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설치비용을 적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하며, 이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궁극에는 경제력이 희박한 지역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태하였다.

또 1994년 5월에는 핵폐기물처분장 설치와 관련하여 경남 장안읍에서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집단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격렬한 유치반대시위를 하여 결국 과학기술처가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부지결정은 없을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도 여전히 공단 지역 주민들의 공해병이 급증하여 부산의 사상지역 주민과 울산, 온산공단 주민들의 피부질환 등의 질병호소가 3배로 늘었고 이는 환경부가 스스로 조사한 1980년부터 15년 동안의 건강조사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자료여서 더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환경운동은 90년대에 들어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환경운동의 이념도 상당히 변모하였다. 즉 종래의 反公害運動에서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전환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변혁의 유토피아는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름 아래 現實主義가 새로운 환경운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주의 전략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고 전국 규모의 전문환경운동 조직들이 생겨나고 또한 지역환경운동 조직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기존의 전국적 규모의 사회단체들도 환경이라는 이슈를 조직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며 언론매체들도 경쟁적으로 환경캠페인에 뛰어 들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푸른 산 맑은 물, 새강 살리기', 동아일보의 '환경신문고 : 그린 폰', 부산일보의 'Clean Family'운동 등은 환경운동을 대중화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시민운동으로써의 환경운동은 시민운동 단체의 특성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기업의 무관심, 무책임을 직접 공격하는 현장투쟁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환경운동연합,

배달환경연합 등의 전문환경운동이다. 이는 직업적 활동가들이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인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고유한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운동이다. 이들은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문제를 대중적 과제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여 환경정책 입안에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80년대말의 공해추방연합이 발전적 변신을 한 것으로 초기에는 전환 및 확산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정부가 환경에 대한 최대가해자라는 인식을 여전히 유지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면 부인하거나 대립하지는 않는다는 즉 '체제내 순수환경운동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선진, 계몽 및 보상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시민운동, 사회운동으로 특히 환경운동의 정착과 대중화를 위해 과거의 진보적 사상지향 즉 현장투쟁과 문제부각 및 여론화 지향에서 최근에는 전문성에 바탕을 두는 법률 및 제도 개선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함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

둘째,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대안에 무게를 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스타일의 환경운동이다. 1989년 창립된 경실련은 1991년 폐물 방류 사건이후 환경에 관심을 갖고 경제정의연구소 내에 환경연구부를 두었고, 주로 환경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부정의, 즉 인간의 복지를 외면한 채 이윤만 추구하는 잘못된 경제구조에 있다고 본다. 경실련은 환경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환경보존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실련 내의 정책연구위원회에 환경문제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여러 분과들이 생기게 됐다. 결국 경실련의 초기 목표에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가 추가된 것이다. 지역의 환경문제에도 관여하였는데 예컨대, 철새도래지인 1995년 주남저수지 보호운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였으며 또 부산경실련은 3개월의 작업 끝에 '양산권 환경지도'를 완성했는데 이는 경실련의 환경분과위원회, 인제대 경실련학생회,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4차례의 답사를 통해 수질오염을 급수별 색깔로 구분표시했다. 또 민간환경단체로는 국내 1호인 낙동강보존회는 초기에 낙동강하구둑 건설 반대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행하였으며 한강중상류 지역처럼 낙동강상류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문제를 극복하자는 YMCA, YWCA, 여성단체, 소비자운동, 지역주민모임 스타일의 환경운동이다. 우선 특정단체 또는 공익단체 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문제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관심사이고, 관심을 가진 일반인을 단체의 회원으로 유인하는데도 기여하는 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단체내의 환경분과운동은 모체가 되는 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조직을 통해 오히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1990년 서울 YMCA시민자주운동본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규범'을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적 책임을 다함과 더불어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생태계보호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먹거리를 먹자는 녹색소비자운동, 주부들의 세제 덜 쓰기 운동, 또 부산의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제도운동확산에 나섰으며, 환경교육연구회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기행과 숲속환경학교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였다. 대학 차원의 환경 운동이 시발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낙동강의 경우 인제대학교의 '낙동강 살리기 정화운동'에 백낙환 총장(현 이사장)을 위시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1996년 5월에 시작하여 2002년 12월 현재 매월 1번 씩 이뤄진 활동이 60차에 이르렀고 '환경보전을 위한 인제대 선언'을 발표하여 정화활동으로 인한 실제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거둔 바 크다. 환경부와 조선일보는 이를 평가하여 인제대에 환경운동대상(1999년)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낙동강 살리기 정신은 2001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 첫 날 아침에 인제대 교직원과 100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SOS(Save Our Sea)운동의 바탕이 되었으며 경남 남해 인근을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넷째로는 관변환경단체들에 의한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정부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며 단체의 임원들은 주로 정부의 권유나 사전 내락에 의해 임명되며 단체의 재정의 상당 부분 정부 보조나 알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식의 政治爭點化의 측면에서는 1989년 여름부터는 환경보호운동의 정당활동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부각되었는데, 그 동안 한국에서 綠色黨의 출현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국민들의 정치,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점과 환경보호를 정치에 접목시키는 기술의 부

족, 그리고 정당조직에 필요한 자금동원 등의 문제가 있다. 1989년 12월 창당발기대회를 마친 대한녹색당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창당을 선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계진입을 노리며 거액의 성금을 낸 정치지망생들에게 창당성금을 돌려주는 바람에 자금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3.2. 1990년대의 환경운동의 특성

3.2.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운동

1995년 지자체단체장 선거 이후는 포괄적으로 말해본다면 지역사회의 이익이 모든 행정과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1공화국 때 제도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는 경제규모의 낮은 수준, 정치참여의 과열증가 등으로 정치적 안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및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5.16으로 집권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축적하기 위하여 경제성장 리변도의 전략을 선택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한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전략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당연히 권한이 분산되는 지방분권전략의 실시를 유보하였다.

제4공화국 및 제 5공화국에서도 경제성장의 달성, 국가안보의 위협 및 지방재정자립도의 저하 등을 이유로 地方分權戰略을 금지하였으나, 제6공화국에서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형성된 권력의 분산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조화한 형태의 개발전략이 요구되었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화보다 행정서비스의 제공측면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주민에게 민주성의 가치를 생활화할 수 있는 것에 존재의미가 있다⁸⁾. 요컨대,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주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아래 실시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국가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와 자연적 공급성의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과 자연보전이라는 상반된 목표에 대한 조화로운 관리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바로 지방자치의 체제와 그 운용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¹⁰⁾ 잘 보전된 환경에서 최선의 노동력과 자원요소들이 산출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정세욱 교수에 따르면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파악할 때, 그 지역의 생활 및 환경여건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

로 하는 地域開發이아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영역의 하나라고 한다¹¹⁾.

그의 주장은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운동에 상당한 시사를 주었는데, 왜냐하면 주민의 만족도의 중요성과 환경여건의 개선을 강조하는 점등 지역개발이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함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개발의 경우 전국토를 중앙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성장모형의 활용으로 지방은 위험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공업단지의 배치 등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환경오염유발성공장의 입주는 불가능하게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대변하고 지역공동체의 환경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의 인구 및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 지방재정수입의 확충을 통해 주민의 편익시설인 도로, 공원, 레크리에이션시설 및 교육시설의 개선 등에 힘쓰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세의 최소화 등의 세제상혜택, 공장부지의 저가구입을 지원하고자 여타의 자치단체와 경합을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및 자치단체의 환경기준의 완화라는 수단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역주민이익의 대표자로서의 지방의회의 관심과 견제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의 긴요함을 재확인하게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1991년, 1995년, 1998년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결과는 환경파괴적 개발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해 상당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광역 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재력가 및 상공업자 및 자영업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매한가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1998년에 처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예외 없이 개발 및 경제 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고 환경의 유지 및 보전은 슬로건으로만 사용되었다. 택지 개발, 주택 건설, 공업용지 개발 및 분양 등을 예외 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사 기능은 거의 전무하였다. 공장의 입주와 같은 사안은 그야말로 별다른 견제 없이 통과되었고,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진행되었다. 부산시의 생곡 매립장의 경우 최대 침출수 배출량을 너무 낮게 잡아 결국 2002년의 폭우로 인

해 침출수를 인근 농수로로 배출하고야 마는 어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또한, 하천의 준설 작업이나 제방의 축조 및 안전대책은 개발 과제에 뒤로 밀려났고, 이러한 기초 시설의 방치는 결국 2002년 폭우로 인한 김해 한림 지역 하천의 제방 파괴 및 극심한 침수로 이어져 농업생산 기반의 파괴와 수천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배제적 개발사업을 牽制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운동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운동은 개발사업 혹은 공단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몇 개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전개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권태준 교수는 環境政治共同體의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즉 生態的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주민들로써 구성된 지역사회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가 단순히 국가정치권력의 지리적 분할로 그칠 경우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동질적인 환경의식화 여하에 따라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주민들이 연대조직과 협조체제를 통하여 하나의 환경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치공동체의 설립이 환경운동의 목표이고 이상이라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代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논의해보기로 하자.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증가하게 될 환경보전의식을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방법으로 집단민원의 형식이나 직접적 행동을 통해 명백히 표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준 등의 도입 및 환경사범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을 담보로 할 수 있을 때,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일과성적인 행동으로 그치기보다는, 궁극에는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지향해야한다. 즉 지역환경과 밀접한 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민발안 혹은 주민투표 등의 결과를 중시하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과학자, 법률가, 교수, 지역사회의 지도자급등이 구성인자가 되는 상시적 환경운동단체는 지역주민운동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경실련의 의정감시단과 유사한 형태로서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홍보한다든지, 또 의정활동에서 환경오염방지과 관련한 투표행태 등을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일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지난번 낙동강 페놀오염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한다. 구미의 한 전자회사의 페놀유출로 인해 대구지역의 수질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물이 다시 낙동강하류를 오염시켜 부산. 경남지역의 상수원수질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런 경우 어느 광역단체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재정을 더 많이 투자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갈등뿐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반목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위천 공단 건설을 둘러싸고 7년째 진행되고있는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사이의 첨예한 葛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자치단체간의 심한 마찰을 유발해왔다.

최악의 경우, 대도시의 쓰레기매립지는 현재로서는 오염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뒤떨어진 산골의 기초자치단체내로 낙착되어, 전국토의 총체적 오염화를 앞당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연합체 혹은 협의체의 구성 및 수계별 광역관리체계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경처는 지난1996년 4월 행정구역단위체제로 되어 있는 수질환경관리체계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4대강 수계별관리체제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각 수계별로 지방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실정에 알맞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요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연합체와 자치단체협의체는 수계별환경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함께 삶을 영위하는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할 것이다. 네 차례의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환경보호에 헌신적인 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차기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지역주민과 환경운동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여건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환경운동은 그 현실적 목표를 세워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화시대의 환경운동은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지방자치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탐구하는 정책적 노력에 치중해야하겠다. 단순한 폭로나 고발성 및 캠페인성 운동을 지양하고, 지방행정과정에 환경문제의 정책의제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즉 압력단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환경관리의 경우 저급한 지방재정자립도와 효율적인 중

양관리의 장점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강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는데, 환경운동은 주로 일시적 사태 뒤의 미봉적 대책발표에 그치거나 혹은 부서 사이의 할거주의 등으로 인해 龍頭蛇尾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한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감시자로서 또 評價者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

3.3. 한국 환경운동의 改善 方案

지난 수십년간 환경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시민의 의식 속에서는 算術級數的으로 증대되었지만, 환경의 자정능력은 산업화와 성장의 명분 아래 幾何級數的으로 파괴되어왔다.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 등이 주가 되는 환경운동이 진행되어왔다. 1980년대 후반이후로는 한국국민의 환경의식도 상당히 증대되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獨逸의 경우 1965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그 동안 지역개발과 교통개발 그리고 면적 이용 등 거의 모든 계획에 대한 생태학적 요구조건이 강조되어서 국토이용관리와 환경보호가 점점 더 近似해간다고 한다¹²⁾.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에 지역의 開發과 成長의 논리와 명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음은 반성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환경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치단체가 성장을 위하여 환경관련 條例를 제정할 때 혹은 업체에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혜택을 주고자할 때, 자치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주민시설 및 便益의 提供者로서의 機能을 상기시키면서 주민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반대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단체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둘러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의식의 深化에도 환경운동은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내 환경운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수적 증가와 운동목적 및 전략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노출되어 내적 분열, 組織 弛緩, 단체들간의 대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합의 움직임과 연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3년 신창현 환경정책 연구소 소장이 "환경단체들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단체들이 연대하여 현안에 대한 공동대책을 추진하도록 가칭 한국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간 협약이나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

였다. 배달환경연합의 장원 사무처장도 "국내환경단체간 힘의 결집과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연합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마침내, 1994년 4월 30여 개 민간환경단체들이 모여 '한국환경회의'를 조직 출범하였다. 이로써 개별차원의 환경운동이 더욱 조직화, 내실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환경정보 및 자료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업무분야의 조정 및 역할분담 등을 통해 환경운동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환경운동단체들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과 국회의원 선거 낙천 운동 등의 지나친 정치적 활동 및 展示性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빈번하여 본질적 목적에 충실함이 요구되고, 환경운동 단체의 도덕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4. 새 천년의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고찰

4.1. 새 천년의 환경 운동의 특성

1990년대 말엽이래 우리는 IMF체제를 거쳤고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 역시 환경운동의 세계적 교류에 힘써야하는데 특히 非政府組織(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간의 교류 및 협력을 提高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협약체결 등 環境外交의 역량강화를 정부에 촉구해야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환경을 지나치게 오염시키는 생산공정과 제품에 대하여 무역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발효되었으므로 환경외교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들이 이제는 환경오염방지형형 생산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하루빨리 실행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발예산지원과 더불어 환경운동 단체들도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엄밀한 심사를 거쳐 환경친화적 기업과 제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홍보하여 기업들에게 자극을 주어야한다.

1997년에 시작된 IMF체제는 경기 위축과 불황의 만연으로 환경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극히 위축된게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 전반에 대한 운동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NIMBY 현상 즉 인근지역에 소각장, 매립지, 납골당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지적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1999년의 영월 동강 댐 건설 반대 운동과 2000년 후반기와 2001년 상반기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개발 반대운동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의 활성화가 환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사이버 시대의 등장은 Web상의 시민운동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고, 특히 오염 문제의 고발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따라서 환경 이슈의 확산의 강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는 환경운동의 참여의 강도를 치열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리고 환경정보시스템(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및 Internet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환경정보의 擴散 및 交流는 특정 지역의 환경문제 혹은 특정의 환경 이슈를 전국민에게 공유하도록 해주었고 토론을 통해 實效性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4.2. 한국 환경 운동에 관한 研究 動向 考察

환경운동 자체의 성장 및 발전과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의 專門化, 多樣化, 普遍化는 그 계도를 함께 해왔다. 70년대 말과 80년대의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주민 운동에 관한 묘사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연구가 科學的이고 엄밀하기보다는 反政府的이거나 理念的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가 사회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회학과 정치학과 등에서 시도되었다. 즉 묘사적이고도 分析的이고 설명적이고 예측력 있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우선 1991년 “한국의 환경운동연구¹³⁾”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에 “한국사회에서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¹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당시까지의 환경운동의 형성과 성장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관련하여 “地方自治時代의 환경운동”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개발 일변도의 지방자치가 환경에 가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¹⁵⁾.

또한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 환경운동 연구가 채택된 경우도 늘어났는데, “한국 전문환경운동단체의 가치지향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¹⁶⁾”, “한국 민간 환경운동의 발전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¹⁷⁾”,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¹⁸⁾”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 “한국의 환경정책과 綠色運動”이란 저서에서 한국 환경정책의 形成과 複雜化 및 녹색운동의 발아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앞서 언급한 구도완은 1995년 “한국의 새로운 환경운동”이란 논문을 한국 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996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저서를 발표하여 꾸준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문구는 1996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환경운동-위천공단 조성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위천공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환경운동이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 환경단체끼리의 정보교환과 상호 이해의 축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있다¹⁹⁾. 위에 언급된 저작들은 환경운동을 시민운동, 주민운동의 범주에서 파악하여 환경의 이익을 지키고 환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운동을 이익집단 간의 갈등현상으로 보고 그러한 갈등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훼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환경이 주는 이익을 強占하는 집단과 그러하지 못한 弱者集團 간의 관계에서 환경운동을 바라보는 環境正義論이 많은 관심을 끈 바 있다. 조명래는 2000년에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라는 논문에서 ‘환경적으로 正義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정의를 위한 환경운동의 조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은 기존의 사회학이나 정치학과 이외에도 女性學, 老人學 등의 분야에서도 환경운동이 연구과제로 취급되었다. 한국 여성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도가 1996년 김선미 등에 의해 발표되었고, ‘여성과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문제의 시각과 운동동향’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²⁰⁾. 또 “환경운동가의 생활일기”라는 논문²¹⁾ 등 실제생활에서의 환경 사랑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됐다. 후에는 여성학계뿐 아니라 家政學界에서도 인간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에 관한 논문²²⁾도 발표되었고, 또 한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역할론이 등장하여 여성환경운동에 관한 연구도 2000년에 발표되었다²³⁾. 老人學 분야에서도 노인들의 환경운동 參與 방안에 관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되어^{24,25)} 환경운동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의 지평이 크게 늘어났다. 다른 나라의 환경 운동 즉 미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 대한 사례연구도 활성화됐다²⁶⁻³⁰⁾. 이러한 사례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국제적 비교연구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의 포커스는 多樣化됐는데, 또 하나의 특이한 경향은 經營學이나 言論學界 등의 이색적인 연구들이다. 디자인학회에서 포장산업과 환경운동의 力學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는데 이는 환경운동이 제품의 과다한 포장을 지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³¹⁾. 그런데 최근에는 제품의 포장지로 재활용된 용지를 쓰는 업체들

이 미국 등에선 이미 보편화 되어있고 한국의 경우도 점차 그 수가 증대되고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도 일찍이 환경보호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 마케팅(Green-marketing) 즉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과 홍보가 중요함이 발표됐고³²⁾, 생산성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綠色生産性運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³³⁾. 매스컴학에서는 언론과 환경운동의 관계에 관해 계몽과 갈등의 이중주라는 측면의 연구³⁴⁾와 환경운동의 미디어 戰略과 議題形成 能力에 대한 연구³⁵⁾도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환경운동의 연구는 환경운동의 性格과 類型의 변천에 따라 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이 넓어지고 다양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시민사회의 참여 및 갈등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치학적인 분석과 사회학적 논의가 대중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이버 시대의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와 國際的 連帶 등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

5. 결 론

지금까지 한국 환경운동의 발전에 관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새 천년의 환경운동은 대중성의 확보 및 국경을 초월하는 오염에 대항하는 국제적 환경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시대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 예컨대 오염 현황 고발과 확산의 속도를 엄청나게 신속하게 만들었고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회원가입의 용이함과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은 지난 번 동강 댐 반대운동과 새만금 사업 항의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리고, 황해의 오염같은 경우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혹은 서해안의 지방자치단체와 中國의 칭따오시와의 협력은 양국 간의 힘의 균형이나 무역 관계의 대차대조표적인 굴레로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도 황해의 오염을 염려하고 보전을 원하는 환경운동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고 한국의 환경운동단체와 협조하여 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커지리라 볼 수 있다³⁶⁾. 黃砂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Giddens의 말을 빌리면,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新自由主義의인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계의 시민들이 國家의 境界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³⁷⁾.

그리고 IMF 체제 이후 우리 한국 사회는 社會的 安全網의 훼손과 그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불협화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환경 운

동이 훼손된 환경에 대한 事後的 투쟁만으로 그쳐서는 환경의 보전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환경운동이 투쟁위주의 운동으로 고착화되기보다는 오히려 持續可能的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의 보전이란 두 명제 사이에서 '개방적 공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해야 한다. 환경운동에 관한 연구는 시대와 문화 및 환경의식의 변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론적 연구를 지향함과 동시에 효용성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폭력과 전쟁,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등과 같은 現代性的 부정적 결과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 즉 省察的 現代化的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적 연구도 당연히 필요하다³⁷⁾. 그러나, 순수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實事求是의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것은 환경운동이 우리의 삶의 수준과 미래 세대들의 생존과 쾌적한 삶의 可能性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1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논문임.

참 고 문 헌

- 1) 정호경, 김지하 외 1985, 삶이나 죽음이나, 형성사.
- 2) Vogel, D., 1986, National Styles of Regulation: Environment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 Press.
- 3) Mckean, M., 1981, Environmental Protest and Citizen Politics i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 변동건, 1985, 한국인의 환경의식조사, 한국정치학회보, 19.
- 5) 환경청, 1986, 환경보전.
- 6)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 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7, 우리 애들만은 살려주이소, 민중사.
- 8) 이성복, 1989,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23(2), 506.
- 9) 노용희, 1988, 한국의 지방자치-회고와 전망, 13-16.
- 10) 김안제, 1988,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대명출판사, 11-15, 53-55pp.
- 11) 정세욱, 198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 행정체제, 한국행정학보, 23(2), 441.
- 12) Lersner, 1991, 독일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공해대책, 37-43.
 - 13) 권해수, 1991, 한국의 환경운동 연구, 현대사회, 11(2).
 - 14) 김근배, 1991, 한국사회에서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2, 이론과 실천사.
 - 15) 김성수, 1991,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운동, 지방과 행정 연구, 3(1).
 - 16) 최경애, 1992, 韓國 專門環境運動團體의 價値指向과 그 要因에 관한 研究.
 - 17) 한경필, 1993, 韓國 民間環境運動의 發展過程 및 特性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8) 구도완, 1994,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 김성수, 1996,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수질보전정책연구 : 낙동강 수계오염과 위천공단 조성에 관한 갈등해결의 모색, 한국환경과학회지, 5(3).
 - 20) 이진아, 1996, 문제의 시각과 운동동향, 여성과 사회, 특집 여성과 환경.
 - 21) 권귀원, 1996, 환경사랑 실천, 말처럼 쉬운가요? - 환경운동가의 생활일기 -, 특집 여성과 환경.
 - 22) 박순희, 2000,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 23) 권경희, 2000, 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한계성 :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 24) 정수복, 1994, 노인과 환경보호운동추진방안과 모색 ; 토론1, 한국노년학.
 - 25) 최병두, 1994, 노인의 환경보호운동 추진방안과 모색, 한국노년학.
 - 26) 구도완, 1998,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환경운동, 전기사회학 발표문 요약집.
 - 27) 박재묵, 1998, 미국의 환경운동 - 전국적 환경운동단체의 자원동원을 중심으로, 98후기사회학 발표문요약집.
 - 28) 오경택, 1999, 미국 환경운동단체들의 발전 및 정치적 활동 = their evolution and influencing activities, 國際政治論叢, 39(1).
 - 29) 오경택, 1999, 지구온난화 레짐형성에 관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환경운동단체와 업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 30) 유근배, 1997, 미국의 환경운동, 美國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20.
 - 31) 박봉래, 1994, 포장산업과 환경운동의 역학적 관계 연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논문집.
 - 32) 김은녕, 1992, 환경보호운동에 대응한 그린마케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 33) 김성수, 1997, 環境親和的 綠色生産性運動의 方向設定, 生産性論集, 韓國生産性學會, 17.
 - 34) 노진철, 1995, 언론과 환경운동 : 계몽과 갈등의 이중주, 한국사회와 언론, 한울, 6.
 - 35) 민영, 1997, 사회운동조직의 집합행위 프레임, 미디어전략, 의제형성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 36) 김성수, 1998,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1998년도 연례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37) 한상진, 2000, 울산 및 여천공단 주변의 환경악화와 이주문제,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